"한반도 분단장벽 무너뜨리는데 세계가 나서달라"

박대통령, 유엔총회 첫 기조연설서 국제사회에 호소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제안·北 인권도 거론

박근혜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 연설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의 장 벽을 무너뜨리는데 세계가 함께 나서주기 바란다" 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 69 차 유엔총회에서 행한 취임 후 첫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25년이 되는 해 인데 아직도 한반도는 분단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 다"고 상기하고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그리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유엔 데뷔무대에서 남북분단 의 고통을 토로하면서 유엔 등 국제사회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지지를 강력히 호소한 것은 남북통일 이 지역적 이슈가 아닌 글로벌 과제임을 전 세계를 상대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15분에 걸 쳐 한국어로 진행한 기조연설을 통해 ▲평화통일 ▲북핵과 동북아평화 ▲일본군 위안부 ▲북한인권 ▲글로벌 이슈 등 제반 현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 장을 설명하고, 유엔 3대 임무분야에 대한 지속적 인 기여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문제에 연설의 상 당부분을 할애하면서 "독일통일이 유럽통합을 이 루어 새로운 유러브이 주춧돌이 되었다면, 통일된 한반도는 새로운 동북아를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혀 남북통일을 통독에 비견하는 일로

또 "DMZ(비무장지대)의 작은 공간부터 철조망 을 걷어내고 남북한 주민들이 자연과 어우러져 소 통할 수 있다면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은 생명과 평화의 통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 엔 주도 하에 남북한, 미국, 중국 등 (6·25) 전쟁 당 사자들이 참여해 국제적인 규범과 가치를 존중하 며 공원을 만든다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통일 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의 현안으로 떠오른 북한의 인권과 탈북자 인권문제도 동시에 거론하 면서 국제사회의 압력 및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큰 관심과 우려 를 갖고 있는 인권문제 중의 하나가 북한 인권"이 라며 유엔의 조치를 촉구한 뒤 "조만간 유엔이 한 국에 설치할 북한 인권사무소가 이러한 노력을 지 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어 느시대,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분명히 인권과 인도 주의에 반하는 행위"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우회적으로 제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26일 오전 귀국



유엔서 기조 연설하는 박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유엔 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대통령 유엔무대 강행군 링거 맞으며 컨디션 조절

박근혜 대통령이 캐나다 국빈 방문과 미국 뉴욕 에서 열린 유엔총회 참석 등 지난 20일부터 닷새간 강행군을 이어가다 결국 컨디션 조절을 위해 수액 주사(링거)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전날 밤 체력 소진을 우려한 수 행 의료진의 권고로 받아들여 이런 조치를 취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국내에서부터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유엔 다자협의의 성공 을 위해 미리 준비와 공부를 많이 했다"며 "캐나다 에 도착한 이후 어제까지 FTA 체결과 에너지 기술 협력, 유엔 다자회의, 그리고 3차례 양자회담을 위 해 하루 2~3시간씩 쪽잠만 자는 등 강행군을 계속 했다"고 전했다. 특히 "수행원들이 일정을 따라잡 기에도 힘에 부칠 정도였다"며 박 대통령이 데뷔무 대이기도 한 유엔에서 매우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 냈음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윤장현 "현장속에서 시정 해법 찾겠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25일 "시민의 목소리가 있는 현장속으로 들어가 주요 시정의 해법을 찾겠다"고

윤 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시청 간부회의에서 "앞 으로 시장은 현장으로 나가겠다. 간부 공무원, 실무 자 등과 함께 현장에서 학습하고 토론해 정책을 결 정하겠다"면서 "직접 눈으로 살피고 이해 관계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다면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정책이나 사업이 결정되고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 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또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 온 시장위주 의 행사를 시민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재차 강조했



윤 시장은 "민선 6기 들어 많 이 바뀌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아직도 여러 행사가 시장 중심 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면 서 "행사는 장애인, 여성, 노동 자 등을 행사의 중심으로 치르 고, 시장은 이들을 격려하고 축

하해주는 형태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윤 시장은 지난 23일 광산구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 동포가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광주시가 고려인 지원 조례를 제정한 만큼 행정에 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원순 "지방정부도 대북사업 할 수 있게 허가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외교·안보·통일 문제에 대 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협력해야 하며, 지방정 부 차원의 대북사업도 허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

미국을 방문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현지 시간) 미국외교협회 초청으로 워싱턴 외교인사들 과 이 협회에서 좌담회를 열어 한반도 평화 실현 방 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기조연설에서 "외교는 더 이상 중앙정 부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특히 서울 같은 수도 의 공공외교는 중앙정부만큼 중요하니 중앙과 지방 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통일에 지방정부와 NGO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가 대북 교



류·협력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 게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박 시장은 또 문화적 교류 방안으로 경평축구 재개와 서울 시향의 평양 공연, 서울과 평양 의 자매결연을 제안하며 "서울 시에 남북관계위원회와 남북교

류기금이 있지만 활용되지 못해 별 진전이 없었다" 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한미동맹의 중요성도 강조, "외교·안 보·통일의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며 이것이 한미동맹의 뿌리이자 열매로, 한미관계가 굳건히 유지된 건 이런 가치를 공유했기 때문"이라

지방정가

"윤시장, 시의회와 소통 부재"

광주시의회 주경님 행정자 치위원장(새정치·서구4·사 진)은 25일 시의회 정례회 본 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윤 장현 광주시장이 그동안 보 여온 시의회와의 소통 부재 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갬코사업은 시작부터 각종 의혹 과 사기논란에 휘말려 시의회가 특위구성 조 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 제를 제기한 사업이었는데도 시의회에 사전 보고나 아무런 설명조차 없이 소송포기를 발표 했다"며 "윤 시장의 시의회와 소통 철학이 조 직내에 스며들지 않았거나, 시의회 경시풍조 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밖에 볼수 없다"고 주장

그는 이어 "민선 6기 시작과 함께 시장 철학 과 비전이 담긴 조직개편안 처리과정을 비롯해 법령을 위반한 의회사무처 인사, 인천아시안게 임 성화 봉송 미통보 등 시의회와의 소통부재 에 따른 갈등이 있을 때마다 윤 시장은 소통을 강조하였으나 개선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질

주 의원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시민 없는 시민시장'을 자초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시의회와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 중학교 야구부 부족"

광주시의회 김민종 산업건 설위원장(새정치·광산 4·사 진)은 25일 열린 광주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첨단중 학교 야구부 창단 당위성을



김의원은 "현재 광주시교육청이 육성중인 야구팀은 초등학교 7개교(153명), 중학교 4개교 (141명), 고등학교 3개교(94명) 규모"라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는 졸 업생들은 야구부팀이 적어 운동을 포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

그는 이어 "광역 시·도별 야구부 팀이 5개팀 미만은 전국대회 출전권이 1장이며, 5개팀 이 상은 2장의 출전권이 있는 만큼 1개팀을 창단 할 경우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 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은 창단 초기 예산이 약 20 억원이 소요될 것에 대한 부담으로 창단을 지연 하고 있는데, 매년 1000억원 이상 불용처리를 하고 있는 교육청이 예산 탓만 하는 것은 탁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